

이재명측, 이낙연 달래기 총력...“대승적 결단할 것”

우원식 “이낙연 원칙 중요시...최고위 결론 낼 것” 이재명계 정성호 “백의중군 하겠다” 원팀 리브콜 설훈 대장동 공격엔 불쾌감 “책임있는 정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2일 경선 승리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반발에도 직접적 대응을 삼가며 달래기에 부심했다. 이 지사가 대선후보가 되자마자 이 전 대표 측이 무효표 논란을 앞세워 사실상 경선 불복 움직임을 보여 대선 행보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서다. 특히 30%대의 지지를 받은 이 전 대표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대선 가도의 최대 과제가 이 전 대표를 끌어안고 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됐다.

이재명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논의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리는 게 맞다”며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런 속에서 경선이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런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 측에서 지도부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을 묻

자 “이낙연 후보님이 평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의 결정,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시고 대승적으로 결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묻자, 우 의원은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한 빨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재창출,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원팀이 되리라 믿는다”며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중군이라도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2선 후보 선출을 함으로써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비롯한 경쟁 후보 인사들에게 공간을 열어줘 빠르게 원팀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부글부글하는 내부 기류도 엿보인다.

캠프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김병욱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선 결과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미 안 된다고 결정할 과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당의 원팀정신도 저해하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후보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캠프의 여러 책임 있는 의원님들께서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또 우리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설훈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너무 격양된 말을 해서 어떤 게 이낙연 캠프의 진의인가라는 게 조금 헷갈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던 설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구속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대장동 제보 관련)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설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에 대해 “만약 그게 신뢰할 만한 것이고 정말 구체성 있는 진술이라

고 한다면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를 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정보, 짜라시성 정보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인된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좀 더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힐난했다.

최이슬기자

경선 승복 압박 받는 이낙연, 어떤 결단 내리나

당 지도부, 이재명 후보 공식화...이의제기 지지 ↓

경선 승복 압박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 상태다. 이 전 대표 캠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사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다른 경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사를 대통령 후보로 공인했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측과 이 지사 측과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에도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사태에 중지를 찍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결과가 바뀌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정치적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지지층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라고 이유에서다.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던 설훈 의원은 당 지도부의 행보에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소 3명의 당사자를 만났다는 이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TF 구성에 착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장동 특혜 의혹 방어를 돌입한 상황에서 일종의 엽박자다.

당 지도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대선을 앞두고 적전 분열을 야기한다는 비판의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가 성사돼야 성난 지지층을 달래고 진정한 원팀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가 이 전 대표를 너무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지지층이 돌아설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공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에 원팀정신을 저해하는 행보라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간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문 대통령,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입장 밝혀

“대장동 사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대장동 사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이재명 “원래 계획대로 국감 수감 후 지사직 사퇴”

“조기사퇴 권유 이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

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수행한 후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한 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